

## 재생 에너지 메카 전남, '분산에너지 특화' 최적지

'지역 생산 전력 지역에서 사용'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14일 시행  
전기요금 지역 간 차등화...해상풍력·태양광 등 전력 생산 전남 유리

### 전남도, 국회서 전략 포럼 개최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 등 재생에너지의 메카인 전남도가 오는 14일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특화지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를 위한 용역에 착수한 전남도는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지역 내 소규모 전력 생산 및 이용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전력 판매,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이미 지역 수요를 초과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전남도는 향후 세계 최대 규모의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 등이 예정대로 조성될 경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거나 저렴하게 전력을 이용하고 싶은 반도체·데이터 관련 대기업들을 지역 내로 끌어들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대한민국 분산에너지 수도 전남'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분산에너지 관련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전남도가 주관하고, 신정훈·박지원·서상석·주철현·김원익·조계원·문금주 등 7명의 전

남 국회의원들이 주최한다. 박중배 건국대 교수, 문승일 한국에너지공단 교수 등이 법 시행 의미와 후속 정책 과제, 전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차별화 전략 등을 발표하고 이순형 동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성공을 위한 전략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종합토론도 벌인다. 토론에는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양승호 한국전력 배전망사업실장, 이항범 송실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전남도는 이날 포럼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비즈니스 모델도 제시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에 따르면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40MW 이하 발전설비 또는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 전기, 자가용 발전설비 등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으며, 규제 특례 적용, 저렴한 전기 요금 가격 설정 등이 가능해진다.

전남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에 도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요소를 발굴해 특화지역 선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전남의 지역 특화산업과 분산에너지와의 연계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와 특화지역 지정에 경쟁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울산, 부산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2024년도 미래지역 에너지생태계활성화사업' 공모에서 2개 제안 모델이 선정돼 지역 특성에 맞춘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추진 중이며, 울산은 산학 추진단 구성 및 특화지역 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중이다. 부산은 에코델타시티와 인근 산업단지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수소연료전지, 집단에너지, 태양광 등을 통해 전력과 열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무엇보다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기존 중앙집중 전력시스템에서 벗어나 광역지자체가 전력 생산 및 소비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력이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전남 등에서 비싸게 전기를 끌어갈 수밖에 없어 지역별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제 전남은 에너지 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분산에너지의 핵심거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최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관련 기업 유치 및 산업의 발전 등을 이끌어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태양을 피하는 방법 낮 최고기온이 31도를 기록한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 앞 횡단보도 그늘막에서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 전남대·조선대병원 교수들 전면휴진 절차 돌입

### 13일까지 동참 여부 묻는 설문조사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휴진 결의와 관련, 의료계에 가능한 행정조치를 발동하는 등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날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의협의 결정에 따라 광주지역 상급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의대교수들도 전면휴진 결정 동참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전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 의대 교수회의에서 전면휴진 동참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아직 설문조사 항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휴진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휴진에 대한 방법을 묻는 형

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대 비대위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도권에는 다른 상급병원이 많지만 광주·전남에는 상급병원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민감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배려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대는 12일 설문조사 결과와 타 대학병원들의 참가 여부를 모두 감안해 다시 교수회의나 비대위 회의의 거쳐 휴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조선대는 이날부터 바로 의대교수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나섰다.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조선대 설문조사는 교수의 직위를 묻고 18일 의협주관 휴진 및 총궐기대회 참여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또 18일 휴진 및 총궐기대회가 의결될 경우 참여할 예정인 지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휴진(회래 및 정규 수술) 형태는 객관식(주 1-2회 휴진, 주 3-4일 휴진, 주 5일 휴진, 휴진하지 않는다, 기타)으로 응답을 받고 있다. 조선대 비대위는 이 설문조

사 결과를 가지고 13일 의대전체교수회의에서 최종 결과를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후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당일에 전체 의료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동네 병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우 키울수록 손해" 전남 축산농 상경집회 ▶6면

팔도 건축기행 - 충남 아산 공세리성당 ▶18면



KIA, 선발 마운드 정상화로 정상 탈환한다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바이탈뷰티

##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